

# “대통령 퇴진” 하야 햇불 밝히는 野

### 靑에 총리철회 등 수용 촉구 주말 대규모 장외투쟁 경고 여야 별도특검 협상 본격화 민주 ‘게이트 홍보단’ 운영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하야 정국’의 길로 들어서는 모양새다. 야권 일각에서는 하야를 넘어 ‘탄핵’에 대한 언급도 나오기 시작했다.

특검·국정조사 수용,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사퇴와 국회 추천 총리 임명, 대통령 2선 퇴진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며 청와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당장, 야권은 이번 주말 시민사회 주도의 최대 규모 촛불집회에 맞춰 장외 집회와 함께 하야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민심에 반하는 폭주개각을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해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며 “끝까지 외면하면 불행히도 정권퇴진 운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태 수습의 첫 단계인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청와대가 제안한 영수회담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일방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회담은 할 수 없다”며 “내정 철회, 자진 사퇴, 국회 부결 이 셋 중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최순실 게이트 긴급현안질의 열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백해련(왼쪽부터), 민병두, 김종민, 박영선, 유동수, 변재일, 박정의원. /연합뉴스

국민의당도 점차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주 부족한 사과를 실천으로 메우지 않으면 촛불은 햇불이 되고 민심 쓰나미가 청와대를 덮칠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국수습을 위한 해법을 내지 않으면 민심을 따르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야당에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대통령의 하야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영수회담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무위를 열고 “박

대통령과 여야 3당에 대통령 하야선언-과도중립내각 구성-대통령 사임-조기대선으로 이뤄지는 질서 있는 하야 및 평화로운 권력 이양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동시에 별도특검을 위한 여야 3당 협상 본격화를 선언하며 압박 수위를 올렸다. 민주당은 이미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검사 30명이라 매머드급 수사진으로 최장 150일에 걸쳐 수사하겠다는 특검법 초안을 만든 상태다.

민주당 내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병계 의원은 “조안으로 새

누리당·국민의당과 조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2주 정도 지나면 검찰 수사가 일단락될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린다는 취지에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홍보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국 혼란에도 제1야당으로서 국가 정책을 쟁긴다는 취지에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해진 전 국무총리를 참석시키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지원 체제’ 한달 더... 후임엔 김동철

###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

#### “하야 정국 정치적 연륜 필요”

국민의당은 7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내달 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풍부한 정치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이후에는 당내 4선 중진 의원인 김동철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정했다.

순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시국의 엄중성을 감안, 현 시점에서 박 비대위원장을 잠정 유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그 이후에는 4선 중진인 김동철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당은 지난달 28일 차기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영입을 추진한 김병준 국민대교수가 비대위원장 후보로 새롭게 거론되면서 비대위원장 선출 일정이 연기됐다.

하지만 김 교수가 지난 2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손대변인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달 2일까지 비대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그 이후부터는 김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전당대회 전까지 40여일 정도 당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비상시국에서의 박 비대위원장의 풍부한 정치적 경험이 필요한데다 김동철 의원이 국회 예

결위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손대변인은 “현재 김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 문제, 예산안 심사에 대한 비대위원장과 유기적 협조, 정국 해결을 위해서 비대위원장 유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 하야 정국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 확보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의 유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이 거론되는 비상시국에서 국민의당을 이끌어갈 정치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인사를 결국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민의당 초선 9명 “박대통령 퇴진하라”

송기석·이용주·최경환·김광수·채이배 의원 등 국민의당 초선 의원 9명은 7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을 더 큰 안보위기에, 외교위기에 빠지도록 놔둘 수는 없다”며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 주시라. 그것만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께 봉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김삼환·이동성·이상돈·최도자 의원도 동참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통치행위도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회복은 불가능하다.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난파 위기 새누리

###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 탈당·지도부 사퇴”

### 이정현 “수습이 먼저... 위기관리 시간 달라”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으로 여권 전체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 금기시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2선 후퇴의 요구가 터져 나왔고, 동시에 이정현 대표 체제도 사퇴 압박을 받으며 와해 위기에 직면했다.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사실상 결별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탈당과 당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전 대표는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면서 “대통령은 당의 제1호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거국중립내각 구성 즉각 수용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 전 대표는 최근 비박계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친박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강석호 최고위원은 이날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에는 친박계만 남게 됐다. 지도부 동반 사퇴를 촉구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또 비박계 성향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모임을 하고 거듭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표 사퇴가 당내 쇄신의 출발점”이라며 “지금까지 국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내 인사들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2선 후퇴, 정계 은퇴 등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친박계를 겨냥했다. 이들은 또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철회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친박계 지도부는 사퇴를 거듭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고립무원의 대통령이 난국의 무기에 짓눌려 신음하는데 혼자 마음 편하자고 유유히 곁을 떠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 되기 싫다”며 “헌정 중단 사태가 오지 않도록,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 위기 관리의 시간적 여유를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친박계인 조원진·이장우·최연혜 최고위원도 일제히 “수습이 먼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반기문, 친박과 거리두기

### 측근 “여권행 언론이 만든 것” 제3지대론 촉각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됐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팬클럽 창립대회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반 총장의 측근 그룹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와 선 거기에 나서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선 반 총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반기문 새누리당 입당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반 총장 측 관계자는 이날 “반 총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민국 대통령인 만큼,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대신해 대접했을 뿐”이라며 “반 총장의 여권 행은 언론이 만든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 총장의 임기 후 거취와 관련해 “반 총장은 노무현 정권이 낳은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반 총장 측은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의식, 반 총장의 팬클럽 창립대회

를 애초 예상보다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다.

반 총장의 팬클럽인 ‘반(潘)뫼뫼’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창립총회를 치른다.

팬클럽 관계자는 이날 “창립총회를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지만, 현 시국을 감안해 간부회의 정도의 규모로 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총회 규모가 축소된 배경에는 ‘최순실 사태’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2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절반 이상에 지부와 준비위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예상보다 지지세력이 모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딴불이는 당분간 여야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글로벌 시민포럼 구성,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꼬마도서관 운동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